



#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 전망 및 분석

2025. 06. 04

법무법인(유한) 바른

## 목 차

|                                   |    |
|-----------------------------------|----|
|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 : 총론 .....   | 1  |
| ■ 주요 정책 변화 예측 및 분석                |    |
| - 노동관련 정책 기조 전망과 대응 .....         | 4  |
| - 상법 개정 이슈 및 준비 과제 .....          | 8  |
| - AI / 반도체 정책 주요 이슈 및 준비 과제 ..... | 12 |
| - 신성장 동력 산업 주요 이슈 및 준비 과제 .....   | 16 |
| - 에너지 정책 주요 이슈 및 준비 과제 .....      | 22 |
| ■ 입법정책 자문 및 분야별 전문가 .....         | 27 |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 : 총론

### I. 이재명 정부 정책추진 방향 전망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체 선거인수 4,439만 1,871명 중 79.4%인 3,523만 6,497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49.42%인 1,728만 7,513표를 득표했고, 이는 2위 김문수 후보(득표율 41.15%)보다 8.27%p, 3위 이준석 후보(득표율 8.34%)보다는 41.08%p 높은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이후 탄핵으로 인해 임기가 중단된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내정치의 혼란, 국제질서 재편, 고착화된 저성장, 사회적 계층간 격차 해소 과제 등 2025년 대한민국의 복합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21대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발표된 직후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반 국정운영의 방향설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예측할 수 있는, 선거과정에서 나온 공약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정책을 이해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책 방향에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업 생존을 넘어서 국민경제 발전, 대한민국의 성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당선인이 강조하듯 역대 어느 정부보다 '성과'를 강조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과감함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예측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국정과제는 향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리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은 제도적 근거를 위한 입법, 정부 역할 수행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국민적 합의와 민간의 참여가 체계적 틀 속에서 추진될 전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 새로운 정책의 입법과 예산이 확정되는 올해 정기국회는 물론, 본격적인 정책추진이 이뤄지는 2026년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 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통해 향후 펼쳐질 정책변화에 대해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II. 새로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초

이재명 정부는 '성과중심'과 '과감한 변화' '경제성장 우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집권세력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기인 향후 2년여는 경제정책 추진과 성과도출이라는 목적 달성의 최적기인 만큼 AI, 에너지, 자본시장, 첨단산업 분야에서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기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 AI 예산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 AI 투자 100조 원 시대 개막
-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 누구나 사용 가능한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 AI 단과대학 신설, AI 병역특례 확대 등 AI 인재 양성

**②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추진
-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
- 재생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구축
- 햇빛-바람 연금 확대로 소멸위기지역 경제 활성화

**③ 주가지수 5,000시대 개막,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 중장기-경제성장 전략 수립,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주주충실의무 도입과 집중투표제로 소액주주 보호 강화

**④ ABCDEF 글로벌 첨단기업 육성**

- A : AI / B : 바이오 / C : 콘텐츠 / D : 방위산업-우주항공 / E : 에너지 / F : 제조업

**⑤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및 과학기술 강국 실현**

**⑥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벤처 강국 실현**

**⑦ 북극항로 시대 국가대응체계 구축**

- 북극항로 전용선박 개발 지원 및 동남권 교통 트라이포트 체계 구축

**III. 보고서의 주요 내용 개관**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본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중 5개 분야의 핵심 내용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주제는 분야별 정책 방향과 기업 요구사항, 대응과제 및 입법정책적 컨설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입니다.**

근로시간 변화, 임금체계 개편, 노동법 개정 등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입법정책 변화 등이 핵심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규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따른 리스크와 대응과제를 정리했습니다.

## 두 번째는 상법 개정에 주목했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상법의 주요 개정 예상 내용과 함께 기업들의 사전 대응과제, 대응과제에 대한 기업형태별 준비사항을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세 번째는 AI 및 반도체 정책입니다.

AI 정책 추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는 정부와 기업의 입장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국가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입장과 기업의 자율성 증대를 요구하는 기업의 입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공통점과 차이점, 예상되는 쟁점 파악을 통해 향후 정책 대응 방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네 번째는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입니다.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조선산업, 로봇분야는 정부 선도투자 및 산업육성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경제계는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기술산업 보호 체계 강화와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 분석으로 효과적 대응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 다섯 번째는 에너지 정책입니다.

에너지 생산과 유통, 저장, 산업적 활용방식 등 근본적 변화가 관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에 따라 발전시설뿐만 아니라 전력망 구축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에너지기업의 형태별 대응과제와 리스크 분석을 통해 대응전략 수립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노동관련 정책 기조 전망과 대응

### I.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관련 변화 예측

#### 1) 주 4.5일제 도입

-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새로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기적으로 주 4일제까지 확대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1차적으로 주 4.5일제 도입과 근로시간제 적용 변화 등이 예상됩니다. 이는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에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2) 임금체계 개편

- 연공서열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 : 고연봉·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포괄임금제 폐지가 검토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전 고용 분야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 민간기업의 임금공개 확대와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를 통해 동일노동 동일 임금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실행계획과 대응이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 3) 비정규직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 노동자성 확대 :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 노조법 개정 :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파업권과 교섭력을 강화 방향으로 전개 예정입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전면적 도입과 단계적 도입 시기 논란, 입법과제라는 점에서 법제도적 정비의 타이밍이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경우 노조법 개정을 전제로 한 대응을 해야 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4) 노사관계 및 노동법 변화

- 노동조합의 영향력 강화와 노사교섭권 확대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육아·가족휴가 확대 등 노동복지 강화 방안이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 5)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노동조합의 영향력 강화와 처벌 수위 및 적용 범위 조정 이슈가 있습니다. 노동계는 산재예방 강화를 원하지만, 기업계는 처벌 수위와 적용 범위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처럼 일하면서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 II. 기업집단에서 요청하고 있는 노동관련 정책

- 경제계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개별 경쟁력 제고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중 높은 비중으로 **개방적이고 기업친화적인 노동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적 노동권리의 유연한 적용과 경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제계의 노동관련 정책적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선 및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확대
- ✓ 연구개발, 고소득 및 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제외 제도 신설(이그젬션 제도)
- ✓ 법정근로시간 단축대신,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유연한 선택적 제도 도입 요청
- ✓ 선진국 수준으로의 대체근로 허용 제도 도입 건의
-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명확화 및 처벌 수준 완화 검토
- ✓ 정년 이후 고령자 재고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마련
- ✓ 직무와 성과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기업 임금 부담 완화
- ✓ 민간 중심 인력 정책 수립
- ✓ 외국인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고용허용 업종 확대 및 동일사업장 체류기간 연장

## III.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주요 이슈

### 1)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유지의 균형

- 근로시간 단축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과제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 우려** 역시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둘러싼 쟁점이 주요 이슈로 부각 될 전망입니다.

### 2) 임금체계 전환의 어려움

- 노사 간 신뢰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대한 노동계 저항이 강하고, 임금은 민감한 사안이어서 노사 간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계 전환은 제도 도입의 높은 hurdles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기 쉽지 않은 만큼 **정부의 컨설팅과 지원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3) 비정규직 권리 확대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고 노조 결성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본격적으

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적용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보험·수당 부담 증가 문제가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4) 노사관계 갈등

-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의 권한이 강화되면 파업 증가와 집단행동 리스크가 높아지는 현상이 예상됩니다. 또한 중대재해법 강화를 지지하는 노동계와 이를 완화하려는 경영계 사이에도 갈등이 예상됩니다.

### IV. 기업 규모별 예상 리스크 및 대응 과제

#### 1) 대기업

- **리스크** : 대기업은 노조 조직률이 높아 노동정책 변화 시 **집단행동**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주 4.5일제 도입 시 생산일 수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 우려가 예측됩니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에 있어서는 대기업들의 우선적 적용이 요구되지만 이와 동시에 추진과정에서 **노조 저항** 역시 걸림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대응 과제** : 노사 협상을 통한 유연근무제 도입 추진을 시작으로 한 **절충안 모색**이 현실적 방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임금과 관해서도 성과중심 **임금체계 전환**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사측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한 노조 동의 방안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2) 중견기업

- **리스크** : 주52시간제 폐지나 추가 근로관련 제도 변화 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경우 임금 부담 증가**가 과제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노동시간 관리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중대재해법 관련 대상 기업인 경우 **안전관리 비용과 처벌 부담 증가**가 경영 리스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 **대응 과제** : 근로시간 단축 시 **고효율 근무체계를 구축**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 체계 재편에 따른 **전문 컨설팅 필요성**은 중견기업에서 가장 높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노동정책 변화에 부응하면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안전투자·산재보험 보장 확대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 3) 중소기업

- **리스크** : 낮은 이익률과 부족한 인력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규제 강화에 취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 4.5일제나 52시간 폐지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우려됩니다. 중대재해법의 사각지대였던 5~49인 사업장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되면 **과도한 손실과 형사처벌** 발생이 우려됩니다.
- **대응 과제** :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현실을 중앙정부에 알리며 유예나 보완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맞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기초 안전교육·시설 보강) 등 추진해 제도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 3) 스타트업

- **리스크** : 근무시간이 길고 급여체계가 유연하나, **근로자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노동법 강화 시 복리후생 개선으로 인재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임금공개 요구나 근기법 적용 확대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대응 과제 : 워라벨과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합니다. 직원 계약서·규정을 재 정비해 법 위반 리스크 사전 대응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수칙과 보험 가입 준비 등을 권장합니다.

## V. 입법 및 정책 컨설팅 지원 방향

### 1) 신규 제도 해석 및 규정 정비

-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변경, 비정규직 권리 확대 등 개정 노동법령과 행정지침을 검토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고용계약서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 노동시간·임금·산재 등 분야별 취약점을 점검하여 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컨설팅이 요구됩니다. 또한 제도 변화의 경우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법 개정 진행을 관찰하고 제도 개선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컨설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상법 개정 이슈 및 준비 과제

### I. 상법 개정 주요 내용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소수 주주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 국한되었으나, 향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할 수 있게 되어, 소액주주의 참여 기회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상장기업의 경우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소수 주주도 이사 선임 과정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감사위원을 개별적으로 선출하여 **대주주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기업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며, 이를 통해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강화하려 합니다. 소액주주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II. 예상되는 변화 및 쟁점

#### 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경영 위축 우려

-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회사 전체'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함으로써, 이사의 의사결정이 소수주주의 요구에 더욱 민감해지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사의 결정이 일부 주주의 이해와 충돌할 경우,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사 책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이사들은 더 보수적인 결정을 하게 되어 리스크를 기피하고 혁신 경영보다는 법적 책임 회피성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 2) 소송 남발과 과도한 사법적 개입

- 다중 대표소송제 및 주주 권한 강화로 인해 소수 주주나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경영을 압박하거나 법적 수단을 자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영 판단의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소한 실책조차도 소송의 빌미가 되는 등 **소송 리스크가 일상화될 우려** 발생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상장 자회사와 복잡한 기업집단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경우, 자회사의 실책이 모회사의 책임으로까지 전가될 수 있는 점에서 경영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 3) 행동주의 펀드 및 외국인 투자자와의 충돌

- 집중투표제와 주주제안권 확대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투기성 행동주의 펀드의 기업 경영 개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경영진 교체, 배당 확대, 자산 매각 등

을 요구하며 단기 이익 추구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이러한 세력과의 갈등을 피하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경영권 분쟁, 위임장 대결, 공개매수(M&A)**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쟁점이 예상됩니다.

#### 4) 이해관계자 간의 가치 충돌

- 상법의 개정은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반면, 노동자, 협력업체, 소비자 등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균형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단기 이익 실현을 위한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이 사회적 책임 경영 또는 지속 가능 경영 원칙과 충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계나 시민사회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III. 상법 개정 등 기업경영 관련 제도에 대한 민간(경제계) 기본 입장

- 경제계는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회 구성과 경영권 방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상법 개정을 포함한 기업 경영과 관련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경제계의 기본 입장과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형법상 배임죄 구성요건 명확화를 통해 기업 책임자들의 경영판단 자율성 확보 필요
- ✓ 상법상 배임죄 폐지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 필요
- ✓ 경영권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의 제도적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등)

### IV. 기업의 사전 준비 및 대응 방향

#### 1)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

- 이사의 충실의무 및 책임 범위 확대에 대비하여,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이사회 내 리스크 평가위원회 등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상 판단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소송 발생 시 **'비즈니스 판단의 원칙(BJR : Business Judgment Rule)**에 근거한 방어가 가능하도록 사전 시스템 정비가 요구됩니다.
- 법무팀 및 로펌 등 제도 개선 컨설팅 그룹과의 **협업 체계 강화**로, 평상시부터 법률 리스크에 대한 사전 자문 및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합니다.

#### 2) 주주 커뮤니케이션 및 거버넌스 혁신

- 개정 상법으로 주주의 참여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은 IR(Investor Relations) 활동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주주친화적 정책의 선도입 검토**가 요구됩니다.

- 주주총회 안건을 설명하는 사전 안내자료의 투명한 공개,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 등으로 개방적인 경영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은 선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독립성 확보, 외부 이사 다양성 제고 등 **신뢰 기반 강화가 필요합니다.**

### 3) 행동주의 투자자 대응 전략 수립

-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에 대비하여, 기업은 평상시부터 ‘**경영권 방어 전략(anti-takeover measures)**’을 **사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호 주주 기반 확대, 자기주식 보유,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정관 개정 등을 통한 방어 기반 구축이 요구됩니다.
- 또한,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비판적 요구 중 합리적인 부분은 선제적으로 수용, 공개 대립이 아닌 **협업의 협력의 채널을 마련**하는 접근 방식 검토도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4) 자회사 경영 체계 정비 및 보고 구조 개선

- 다중 대표소송제의 도입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의 지배·감독 구조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자회사 이사의 경영행위에 대해 모회사 이사들이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는 만큼, **모회사의 내부감사 및 리스크 평가 기능을 자회사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회사에 대해 정기적인 준법감시, 경영실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후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5) 정관 및 사내규정 정비

-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자 주총 등 제도 변화에 따라 **기업의 정관과 이사회 규정, 주주총회 운영규칙 등을 개정**이 요구됩니다.
- 주총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규정, 이사의 자격요건과 해임 조건, 감사위원의 독립성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법적 공백 최소화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 상법 개정 대응 방안 : 기업 유형별 정리

| 구분                | 대기업 (상장사)                                                                                                                       | 중견기업 (상장/비상장)                                                                                                            | 중소기업 (주로 비상장사)                                                                                                     |
|-------------------|---------------------------------------------------------------------------------------------------------------------------------|--------------------------------------------------------------------------------------------------------------------------|--------------------------------------------------------------------------------------------------------------------|
| 공통<br>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의 책임 범위 확대</li> <li>· 집중투표제 도입</li> <li>·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li> <li>· 다중 대표소송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 주총 확대</li> <li>· 주주제안권 완화로 외부<br/>영향력 증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이해 부족</li> <li>· 내부 법무 인프라 취약</li> </ul>                               |
| 지배<br>구조 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구조 개편</li> <li>✓ 사외이사 다양화</li> <li>✓ 감사위원 선출 절차 개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배구조 개선 매뉴얼 필요</li> <li>✓ 감사기능 보완 또는 외부<br/>감사 활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통제 규정 마련</li> <li>✓ 주요 의사결정에 법률 자문<br/>절차 포함</li> </ul>                 |
| 리스크<br>관리 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br/>센터 운영</li> <li>✓ 자회사 리스크 대비 모니터링<br/>시스템 구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회사·자회사 간 보고 체계 정비</li> <li>✓ 법무팀·외부 로펌 연계 체계 구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 판단 문서화 도입</li> <li>✓ 경영진 법률 교육 시행</li> </ul>                           |
| 주주 대응<br>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동주의 펀드 대응 체계 마련</li> <li>✓ IR 전략 강화</li> <li>✓ 정관 및 주총 운영방식<br/>선제 개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액주주 대응 가이드 라인 정비</li> <li>✓ 전자 주총 시스템 도입검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주주 의견 수렴 절차<br/>확보</li> <li>✓ 정관에 집중투표제 관련한<br/>조항 반영 여부 검토</li> </ul> |
| 정관·내규<br>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관 전면 재검토</li> <li>✓ 개정사항 선 반영<br/>(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li> <li>✓ 집중투표제 조항 정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및 감사 관련 규정 명확화</li> <li>✓ 전자 주총 규정 신설 또는 보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인 정관 개정 필요<br/>(전자 통지, 집중투표제 등)</li> </ul>                             |
| 비상장사<br>특화 대응     |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 추진 시 관련 규제의<br/>적용 여부 고려</li> <li>✓ 외부 감사인 지정 기업의 경우<br/>감사 대응 강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관 개정 부담 존재</li> <li>✓ 전문 인력 부족으로 컨설팅<br/>필요 가능성</li> </ul>               |
| 행동주의<br>투자자<br>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임장 경쟁 대비</li> <li>✓ 우호 주주 확보</li> <li>✓ 공시 시스템 강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격적 투자자 대응 매뉴얼<br/>구축 필요</li> <li>✓ 기업설명회 및 주주 응대 개선</li> </ul>                 | 실질적 대응 필요성 낮음                                                                                                      |

## AI / 반도체 정책 주요 이슈 및 준비 과제

### I. 이재명 정부의 AI / 반도체 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

-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은 대한민국을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종합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I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정책 역시 대한민국을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종합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압도적 초격차와 초기기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1)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 : K-AI 이니셔티브: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 전략

- AI 투자 및 인프라 확충 : AI 분야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및 GPU 5만 개 이상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전용 NPU 개발 및 실증 지원 방안 모색이 예상됩니다.
- AI 인재 양성 및 교육 강화 :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강화를 우선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 설립하고, AI 분야 석·박사급 전문 인재 양성 및 병역특례 확대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인력 양성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융복합 인재 육성 지원도 예정돼 있습니다.
- AI 규제 합리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 : AI 관련 규제 점검 및 합리화 추진을 구체화 시킬 전망입니다. AI 특구 확대 및 관련 법령 정비와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등 규제 특례 적용 제도 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협력 및 국제 이니셔티브 확보 :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 조성, 다국적 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 확대, 태평양·인도·중동 국가와의 협력 강화 정책 추진이 예측됩니다.
- 국민 참여형 AI 확산 :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으로 전 국민이 AI 활용 가능하게 하는 국가 사업 출범이 예상됩니다. 한국형 챗GPT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AI를 통한 생산성 혁신 및 신산업 창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예측됩니다.
- AI를 통한 안전 사회 구현 : AI 기반 금융, 건강, 식량, 재난 리스크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 도입이 선도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AI를 활용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와 행정분야 정책에서의 AI 활용·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2)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정책 방향 : K-반도체 대도약 전략

- 반도체 특별법 제정 :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 추진이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세제 혜택 확대 및 공급망 강화 :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세액공제 적용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 지원을 통해 공급망 생태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입니다.

- RE100 인프라 구축 및 클러스터 조성 :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완공으로 RE100 달성 지원 정책 추진이 예상됩니다. 지역적으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가속화로 스마트그린 반도체 단지 구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 예측됩니다.
- R&D 및 인재 양성 지원 :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지원 확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 조기 구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II. AI /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과 경제계 요청 사항

- 경제계는 국가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전폭적인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기본 견해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AIDC) 구축 지원, 제조 AI 활성화, 중소기업 AX\* 산업 기반 마련, 한국형 LLM(대규모 언어모델) 구축, AI 산업을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 우선 공급, AI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고급 AI 인재 양성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 인프라·모델·산업적용(AIX)의 3대 밸류체인과 전력·데이터·인재의 3대 투입요소 강화
- ✓ AI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목표 제시
- ✓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 조성 및 바우처 제공 확대
- ✓ AIDC 관련 투자 세제 혜택 확대, 규제 완화(전력계통 영향평가 완화 등)
- ✓ 제조 AI 특화 Agent 및 디지털 트윈 등 기술 개발 지원
- ✓ 제조 Data Lake 구축 및 민간 중심 데이터 거래 생태계 형성
- ✓ AI 전문 인력 교육, 온·오프라인 컨설팅 제공
- ✓ 저비용 AI 솔루션 및 인프라 접근성 제고
- ✓ AI + 수출기업 연계로 융합형 수출모델 육성
- ✓ 네거티브 규제 적용, AI 수출 전용 정책 지원체계 마련
- ✓ WBL(World Best LLM) 프로젝트 추진
- ✓ 공공 서비스 Use Case 발굴, 민간 활용도 확산 지원
- ✓ 국산 AI 반도체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 ✓ AI 특구 내 전력망 Fast-track, 요금체계 차등 적용
- ✓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대체에너지 활용 기반 구축
- ✓ Common Korea Data Space 구축
- ✓ 산업별 특화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데이터 큐레이션업 육성
- ✓ '원칙 중심' 개인정보 규율체계와 규제 샌드박스 확대
- ✓ AI 중심 특구에 정주 여건 마련 및 민간 공동 인재 양성
- ✓ 해외 고급인재 유치와 노동규제 완화(특별연장근로 등)
- ✓ 네거티브 규제 기반 도입
- ✓ 민간 자율규제와 시행령·가이드라인 정비
- ✓ 글로벌 상호인증체계 협상 추진

\* AI Transformation의 약자. 기업 시스템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

### III.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과 경제계 요청 사항에 대한 비교 분석 (AI 정책을 중심으로)

| 항목            |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                         | 경제계 요청사항              | 공통점         | 차이점                                 | 예상문제점 및 주의사항          |
|---------------|--------------------------------------|-----------------------|-------------|-------------------------------------|-----------------------|
| 투자 및 인프라 확충   | 100조원투자<br>GPU 5만개 확보,<br>데이터클러스터 조성 | AIDC 구축<br>세제혜택 규제완화  | 대규모 투자 필요성  | 상징성 vs 실행구체성                        | 전력수급, 인허가 지연 등        |
| 인재양성 및 확보     | STEM 교육,<br>단과대학설립, 병역특례             | AI 특구내 인재유치 및<br>정주여건 | 고급인재 확보 필요성 | 인재양성 계획 수립 시<br>민간 의견 반영<br>노동규제 완화 | 인재유출, 노동이슈            |
| 규제혁신 및 법제도    | 규제점검 및 AI 특구<br>확대                   | 네거티브 규제 및<br>자율규제     | 규제합리화 필요성   | 정부중심 vs 민간자율                        | 불확실성 해소 위한<br>기준정립 필요 |
| 산업적용 및 생태계    | '모두의 AI'프로젝트                         | 제조·수출산업 중심<br>적용      | AI 산업확산 필요성 | 보편적 접근 vs 실용적<br>집중                 | 중소기업 격차 해소<br>필요      |
| 대규모 모델개발(LLM) | 한국형 챗GPT                             | WBL 프로젝트,<br>인센티브 제공  | LLM 자립 필요성  | 기술확보 vs 활용촉진                        | 활용 부족시 투자낭비<br>우려     |
| 데이터정책         | 다국적협력                                | 공공·산업별 데이터<br>개방      | 데이터 활용 중요성  | 국제 vs 국내 산업중심                       | 보호와 활용의 균형<br>필요      |
| 에너지 및 전력 인프라  | 효율적 공급 강조                            | Fast-track, SMR 활용    | 전력인프라 병목 인식 | 구체성 부족 vs 실천안<br>존재                 | 에너지 정책 연계 필요          |
| 국제협력 및 전략     | 글로벌 투자 기금, 협력<br>강화                  | 상호인증체계 및<br>협상전략      | AI 국제협력 필요성 | 외교중심 vs 기업실익<br>중심                  | 표준변화 대응전략 필요          |

## IV. AI 관련 정책 변화와 입법정책 대응 컨설팅 제안 사항

### 1) 정책변화의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 정부의 AI 정책변화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 ✓ 민관 협력모델 구축

- 정부의 거시적 선언과 기업의 실무중심 접근 방식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기업은 정책실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데이터, 전력, 인재확보 전략

-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핵심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 정책변화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조정

- 정부정책이 AI 생태계 확산을 촉진하려는 방향이라면, 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조정해야 합니다.

#### ✓ 재정 효율성 및 투자우선순위 설정

-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AI를 둘러싼 기업의 재정 운용 및 투자 전략 조정이 중요합니다.

### 2) 결론

- AI 관련 기업들이 정부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분석, 민관협력, 핵심인프라 확보, 비즈니스 모델 조정, 재정전략 최적화**가 필수적입니다.
- CEO 입장에서 기업이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정책 방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내부 실행 전략을 신속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성장 동력 산업 주요 이슈 및 준비 과제

### I. 이재명 정부의 신성장 동력 산업 정책 방향

- 이재명 정부 신성장 동력 산업은 **항공·방위·우주·조선산업** 등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해 산업별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강국과 첨단 미래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 **항공 MRO(정비·수리·분해) 산업 강화** : 항공정비 부품 국산화 및 R&D 지원 확대, 군용기 및 부품 제조 중심으로 특화, 해외 복합 MRO 중심으로 육성 전략 실행이 예상됩니다.
- ✓ **K-공항 모델 해외 수출 지원** : 인천국제공항의 성공 경험에 바탕한 공항 건설부터 운영까지 통합 수출 추진, 국가 주관 컨소시엄 구성으로 해외 시장 선점 전략 실행이 예상됩니다.
- ✓ **K-UAM(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 김포공항 혁신지구를 UAM 허브로 조성, 지자체 시범사업 및 공공셔틀·관광·공공 실증화 사업에 국가 지원 확대, 초기 R&D 투자 확대를 통한 세계시장 선도 정책 마련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 **방위산업 기술 자립 및 수출 확대** : 첨단 국방 AI 기술 기반 구축으로 항공기·미사일·위성 등 전후방 산업 육성,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촉진,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 및 독자 기술 기반의 항공기 엔진 개발,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R&D 세액 감면 정책이 예상됩니다.
- ✓ **우주항공산업 중심지 조성** :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육성, 발사체·위성체·지상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의 R&D 대폭 확대, 우주 항공 우수 인재와 기업 유치 지원 정책 추진이 예상됩니다.
- ✓ **K-조선업 5대 전략 : 지속 가능한 해양강국 도약** :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 선점, '에너지 고속도로'로 풍력 선박 시장 개척, 선박 제조 시스템 고도화, 중소 조선사의 경쟁력 강화, 특수선 건조 및 MRO 시장 육성 등의 정책 집행이 예상됩니다.

### II. 신성장 동력 산업 관련 기업과 경제계 요청 사항

- 경제계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요구, 바이오산업 지원 확대, 친환경 선박 산업 육성, 방위산업과 탄소포집 기술의 국가전략산업 지정,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재정적 보조 등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지원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 고부가가치 위성체계, 발사체, 지상장비 등 통합 지원
- ✓ 우주항공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R&D 집중 지원
- ✓ 핵심부품 및 지능형 로봇 개발 지원
- ✓ 제조현장 및 서비스 분야 로봇 보급 확대
- ✓ 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 등 첨단기술 상용화 지원
- ✓ 글로벌 임상시험, 허가 체계 개선
- ✓ 전기·수소·암모니아 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
- ✓ 스마트 조선소 인프라 및 중소 조선사 지원 확대
- ✓ 차세대 전투기·미사일 시스템 국산화
- ✓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R&D 지원
- ✓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직접환급 제도 도입, 제3자 양도 허용
- ✓ 첨단전략산업 국내생산 유도 위한 세제·보조금·인프라 지원
- ✓ 환경 대응형 소재 R&D 지원
- ✓ 생분해 플라스틱 기술 개발 등에 있어 민간과 공동으로 기술 상용화 촉진

### III. 신성장 동력 산업 정책 항목별 비교 분석

| 항목       |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                   | 경제계 요청사항                         | 공통점               | 차이점                    | 예상문제점 및 대응방안            |
|----------|--------------------------------|----------------------------------|-------------------|------------------------|-------------------------|
| 항공우주산업   | MRO, 공항수출, UAM, 우주항공산단, 우주청    | 고부가위성, 발사체, 지상장비 통합지원, 인력·R&D 집중 | 우주항공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인프라 중심 vs 기술·인력 집중     | 중복투자 방지 및 민관협력 조율 필요    |
| 방위산업     | 국산화, KF-21 후속기, 엔진개발, R&D 세액감면 | 차세대무기체계 및 CCUS 국가전략 지정           | 기술자립화 및 수출확대 필요   | 항공AI 중심 vs 기후기술까지 포함   | 전략 일관성과 우선순위 조정 필요      |
| 조선산업     | 친환경선박, 스마트조선소, 자동화, MRO        | 친환경 연료선박, 스마트 조선소, 중소기업 지원       | 친환경·스마트전략필요성      | 기술중심 vs 시장 실수요 중심      | 국제표준 및 환경규제 대응필요        |
| 로봇산업     | 육성 지원                          | 핵심부품 및 제조·서비스로봇 지원               | 제조혁신 필요성          | 구체적 정책 제안              | 수요창출 위한 공공조달 확대 필요      |
| 바이오산업    | 육성 지원                          | 정밀의료, 글로벌임상, 허가체계 개선             | 바이오 고도화 필요        | 구체적 정책 제안              | 인증체계 및 글로벌 시장 대응 필요     |
| 첨단전략산업   | 반도체, AI 중심 전략산업 집중             | 보조금, 세제, 직접환급 등 유인책              | 국가경쟁력 핵심 인식       | 산업집중 vs 범위확장           | 산업편중방지 및 균형투자 필요        |
| 에너지·소재분야 | RE100, SMR, 전력인프라 언급           | SMR, CCUS, 생분해 플라스틱 R&D          | 에너지 인프라 필요성 공감    | 전력 공급 중심 vs 기후대응 기술 중심 | 기술 상용화 시기 예측 및 투자 연계 중요 |

## IV. 신성장 산업 정책 분석

### 1) 공통점

- 신성장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자립화**를 추진하며, **R&D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특히, R&D 투자는 장기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합니다.

### 2) 차이점

-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기반 시설 및 제도 개선 중심으로 접근하는 반면, 민간·기업의 요청 사항은 기술실행 및 시장 연계 중심입니다.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가 공공기관과 정부 차원에서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향이라면, 민간·기업은 보다 직접적인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이러한 차이점은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실행방식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조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3) 협업구조 필요 사항

- 신성장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규제 개선과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은 기술개발과 시장 개척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공동연구개발(R&D), 투자유인책, 정책 조율 기구 등의 **체계적인 협업 모델**이 필요하며, 이러한 협력 구조가 구축되면 정책실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V. 정책변화에 따른 주요 도전과제

### 1) 정책 방향 및 지속성 문제

- 정부 정책은 정권교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방향 설정이 어렵다는 점이 큰 도전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연한 사업구조를 유지**하고 정부 지원이 끊기더라도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 2) 규제변경으로 인한 기술 및 시장 진입 지연

- 특정 산업의 규제가 강화되거나 변경될 경우, 신기술의 시장 진입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규제변화에 대비한 사전 대응 전략(**규제샌드박스 활용, 자율 인증 체계 구축 등**)을 준비하여 신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 3) 산업경쟁력 유지 및 글로벌 시장 대응

- 글로벌 시장에서는 다른 국가들도 첨단 산업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확

보하는 것이 도전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 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4) 신규투자 및 재정조달의 어려움

-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신사업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벤처 투자, 전략적 파트너십, 정부 지원금 확보 등 다양한 재정 조달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 5) 기술개발과 인력확보 문제

- 신산업 육성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핵심 기술 개발과 인재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내부 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교육 투자가 필요합니다.

### VI. 기업의 대응 전략 : 입법 및 정책 컨설팅 방향

#### 1) 정부 정책 변화의 정확한 이해

- **정책의 세부 내용 분석** : 신성장 산업 관련 정책에서 제공하는 지원책(세제 혜택, R&D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파악하고, 기업이 활용할 기회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 **관련 법률 및 규제 변화 예측** : 산업 관련 법과 규제가 변경될 가능성을 미리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팀 및 외부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야 합니다.
- **산업별 우선순위 확인** :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기업의 투자 방향을 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민관협력 및 정책대응 네트워크 구축

- **정부 기관과 적극적 소통** :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담당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 **산업 협회 및 연구소와 협력 강화** : 정책변화에 따른 산업 내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공동 연구 및 개발(R&D)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 활용** :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간 협업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 3) 기술개발 및 R&D 투자조정

- **정책 방향에 맞춘 기술 개발 우선순위 설정** : 정부가 지원하는 핵심 기술(예: 반도체, AI, UAM, 바이오 등)에 맞춰 연구개발(R&D)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여 신기술의 빠른 상용화를 도모하는 방법(규제 완화 활용)**, 또는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국제 연구 협력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시장변화 및 민첩한 전략 수립

- **정부의 인센티브 활용** :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감면, 보조금, 연구 지원금 등의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 **신규 시장 개척** : 기존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정책 변화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신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 **소비자 및 기업 수요 변화 대응** : 정책 변화가 기업 고객이나 소비자의 요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 5) 재정 및 리스크관리

- **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적 영향 평가** : 산업별 투자 유치 가능성과 정부 지원금 활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경제성 분석 및 사전타당성 검토** :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 대상 및 규모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사업 다각화 및 안정적인 수익 모델 구축** : 특정 산업의 정책 변화가 기업의 주력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고민해야 합니다.

## 6) 규제변화 및 법률대응 전략

- **정부 규제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향 정리** : 산업별 규제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 내부 법무팀과 협력하여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정책 개선 및 규제 완화 요청** : 산업 내 주요 기업들과 협력하여 정부에 정책 개선 및 규제 완화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산업 규제 조정에 대한 내부 팀 구축** : 규제 대응 및 정책 분석을 전담할 수 있는 내부 팀을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을 도모해야 합니다.

## ✓ 결론

- 정책변화는 기업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많은 도전과제를 동반합니다. 기업들은 장기적인 전략을 갖추고, **민첩한 정책 대응능력을 강화**하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성장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 CEO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이 기업의 미래 전략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전략적 컨설팅을 통한 사전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 에너지 정책 주요 이슈 및 준비 과제

### I.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

- **(정책 방향)**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일상화됨에 따라 기후 위기 대응이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했다는 문제인식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 이재명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계획

- 2030년까지 서해안에 20GW 규모의 해상 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는 해상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040년까지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하여 전국에 해상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연결하며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계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계획입니다.

#### ✓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

-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 전국에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하여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사업이 포함됩니다.
-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들을 지역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 ✓ 에너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산업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생각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망, ESS 산업의 경쟁력 강화, 히트펌프·그린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지원 정책, 전기차·이차전지 등 연계산업에 집중 투자 등이 주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햇빛·바람 연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전남 신안군의 사례처럼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햇빛·바람 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주민 소득을 늘리고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입니다.

### II.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 실현에 대한 검토 사항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 1)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추진 전략 필요

-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필요한 총투자 규모는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재생에너지 발전 지역과 전력 수요 지역 간의 거리로 인해 송전망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한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민간 투자 유치 필요 주장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투자 유치 방안을 검토 중이나, 민간 투자자들의 수익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 투자 확대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2) 에너지 산업계와의 이견 조정 여부

- 산업계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기요금 인상 우려로 인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던 만큼 이재명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한 사전 이견 조정 필요합니다. 특히, 전력 다소비 업종의 기업들은 전기요금 상승이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율과 적절한 정책조정이 요구된다 볼 수 있습니다.

## 3) 지역 주민과의 갈등 회피 수단 필요

-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송전탑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과 소통 전략이 필요합니다.

## III. 민간 경제주체들이 이재명 정부에 건의하는 에너지 정책

-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 경제주체들은 산업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의 전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공급정책 역시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전 계획과 연동해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다양한 에너지 정책의 하나로 **원자력발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활용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 전력시스템의 단계적 개편
- ✓ 전기요금 결정체계의 합리화
- ✓ 전력망 건설 촉진
- ✓ 분산에너지 활성화
- ✓ 첨단전력기술 개발 및 초고압 직류송전시스템(HVDC)\* 기술 국산화 지원
- ✓ 다양한 에너지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
- ✓ 수소에너지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 확대
- ✓ 실효성 있는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 정책 설계
- ✓ 국내 에너지산업 공급망 제조기업 육성
- ✓ 일본 및 대만 등 동아시아 LNG 수입국과 공동구매 협력체계 구축
- ✓ LNG 트레이드 활성화
- ✓ 한일 에너지협력 강화
- ✓ 차세대 원자로 실증부지 확보 및 실증로 건설지원

- ✓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마련
- ✓ 에너지산업 총괄 조정 정부기구 설치
- ✓ 에너지 정책, 요금, 규제, 인허가 등 통합 조정 역할 마련

#### IV. 이해관계자 분석 : 기업 리스크 및 사전 준비 항목

##### 1) 발전회사 (석탄·가스·원자력 발전사)

- 화석연료 발전 비중 축소를 전제로 짜인 에너지 정책이 마련될 경우, 석탄·LNG 발전사의 수익성 하락과 발전량 축소 위험 증가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쇄 공약까지 제기된 만큼 발전 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원자력 발전사도 명확히 탈원전 여부를 제시하지 않아 불확실성 존재합니다. 이와 함께 조세·보조금·탄소가격제도 변화 가능성에 대비, 비용구조와 투자 계획 재검토 필요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 신재생 발전사(태양광·풍력 개발사)의 경우, 정책 의도대로 송전망이 확충되면 수용력이 커져 발전소 증설 기회 증가 예상되는 것도 관심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민 반발·입지 제한으로 인허가 지연 리스크가 있는 만큼 지역주민 협의, 환경·입지 규제 대응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고, 정책 추진 속도를 고려한 장기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송·배전회사 (한전 및 자회사 등)

- 정책의 핵심 집행 주체로서, 초고압·직류송전시스템(HVDC) 송전망과 대규모 변전 설비 투자를 담당 하게 하는 만큼 투자비용과 재무 부담의 우려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안정성 확보(정부예산 지원·민간투자유치 방안 검토)와 투자회수체계 정비(전기료 요금체계 개편 등)의 사전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술적으로는 해상 직류송전시스템(HVDC) 건설과 운영 경험이 제한적이므로 외국 선진 기술 확보와 국산화 R&D, 인력 양성 필요, 송전망 신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지자체 규제, 토지수용·전기안전 인허가 절차 등을 조기 대응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 예측됩니다.
- 이밖에 회사 내부적으로는 부채 구조조정,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재정위험에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 3) 재생에너지 개발사

-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정책에 따라 사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지만, 인허가 및 주민 수용성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해양생태 영향, 어업권 분쟁 가능성이 있으며, 육상태양광도 농지 훼손 우려로 갈등이 많았다는 점에서 입지 선정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 지자체 협력, 주민지원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 있습니다.
- 한편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대기업 수요처가 늘어나면 전력 구입계약(PPA)\* 수요 증가 예

\* 초고압직류송전(high-voltage, direct current, HVDC)은 전력 그리드 시스템 중 하나. HVDC는 기존의 교류를 사용하는 그리드와 대조적으로 직류를 대량으로 송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상 이슈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발전사업자는 정부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제도 변화, 신재생 발전량 의무화(RPS), 전기요금 체계 변화 등에 대한 **법·제도 해석을 사전에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ESS·전력망 장비업체

- 정책 기조상 ESS(에너지 저장장치) 산업 육성이 부각되므로, ESS 생산·설치사와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업체들은 성장 기회**가 있지만, 국제 경쟁 심화와 배터리 소재 공급망 문제, 높은 초기 투자비가 리스크로 분석됩니다.
- ESS 업체는 기술 표준화·인증 대응, 대용량 에너지저장 장치 설계 역량 강화 준비, 전력망 장비사(송배전·제어장치 업체) 역시 HVDC 변환장치 등 신기술 확보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의 보조금·세액공제 정책, 전력계통 연계 규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혜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법 모색**이 요구됩니다.

### V. 에너지 기업 형태별 맞춤 대응 전략

#### 1) 발전회사 (석탄·LNG·원전 등)

- 중장기적으로 **발전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재생 설비 인수·합병, 그린수소 연료전환 플랜트 투자 검토 등을 통해 변화에 대응)
- 한전과의 전력판매 계약을 개편하거나 변동비·고정비 구조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재정모델을 준비가 요구됩니다. 또한 탄소배출권, 환경규제 강화, 전기요금 인상 등 **예상되는 리스크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 지원(예: 정부 탄소감축 보조금)을 확보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 2) 송배전회사 (한전 등)

- 정책 추진 주체로서 직류송전시스템(HVDC) 망 구축 전략을 명확히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는 **정부·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대형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조직·기술 역량 확보** 등이 있습니다.
- 전기료 수입구조를 **미래형 요금제(수요반응·기본요금 비중 조정 등)**로 전환하여 투자비 회수 방안 모색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부채 감축 계획과 함께 대체 투자(ESS 등) 확대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 3) 재생에너지 개발사

- 송전망 확충을 전제로 한 사업 확장 기회를 활용하되, 규제 허점과 갈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RE100 협약을 맺는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전력구입계약(PPA)를 확보하고 그린수소 생산·이용 프로젝트 등 부가가치 사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4) ESS·전력망 장비업체

\* Power Purchase Agreement는 전력수급계약 또는 전력구매계약이라 불리며, 발전사업자와 송배전사업자, 전력소비자 간에 구입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는 전력 구입에 관한 계약을 의미한다.

-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정책 수혜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대비해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제조·수입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 기업별로는 스마트그리드, AI 에너지관리 솔루션, 대형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설계 역량 등을 강화가 필요합니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 입찰 대응)
- 국제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을 준비하며, 국회나 산업부의 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에 맞춘 장비 국산화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변화에 능동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VI. 에너지 정책 및 입법 변화 대응 과제

### 1) 에너지·전력 정책 관련 법제 정비 대응

- 전기사업법·재생에너지법·전력산업기반기금법 등 현행 법규와 개정 추진 현황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재생 발전 의무화((RPS)\*\* 조정, 송배전망 인프라사업에 대한 특례조항,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을 위한 전력망 규제완화 여부 등의 파악이 이에 해당합니다.

### 2) 허가·인허가 절차

- 풍력·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송전선로 부지확보 및 승인, 환경영향평가(배전망·해상풍력) 절차 등 법적 요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설계·환경심의), 정책 컨설팅 전담팀을 구성해 협력체계 구축으로 허가 지연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 3) 정부 보조금·세제 지원

- 산업부·국토부·지자체의 풍력·태양광 보조금, ESS 연구개발 지원, 그린수소 투자 인센티브 등의 프로그램을 확인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자문 준비가 요구됩니다.
- 해당 사업의 예산 공모 시기·조건을 파악하여 선제 대응 전략의 사전 마련이 필요합니다.

### 4) 금융구조·계약조건 검토

- 장기간 대규모 투자사업이므로 '공공-민간 협력(PPP)'이나 녹색채권 발행 등 자금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계약시 담보·위험분담 구조를 사전 설계해야 합니다. 발전회사는 전력구입계약(PPA), 송배전회사는 시설투자비 회수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변경 가능성도 모니터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5) 이해관계자 협상·분쟁해결

- 송전선로·발전소 인근 주민 및 지자체와의 갈등에 대비해 공론화 절차, 주민설명회, 갈등조정 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하는 사전 컨설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의 토지수용 분쟁, 민원 발생 시 법적 대응 전략(행정심판·소송 등)과 화해·중재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은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후에 방출하는 시스템이다.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2012년이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500MW)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RPS제도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

## 입법정책 자문 및 분야별 전문가

---

### [입법전략자문\_총괄]

- |               |                 |                             |
|---------------|-----------------|-----------------------------|
| · 이영희   대표변호사 | T. 02-3479-5756 | E. yhlee@barunlaw.com       |
| · 이용준   고문    | T. 02-3479-7817 | E. yongjun.lee@barunlaw.com |
| · 이수남   전문위원  | T. 02-3479-6823 | E. sunam.lee@barunlaw.com   |

### [노동(중대재해)]

- |                 |                 |                              |
|-----------------|-----------------|------------------------------|
| · 정상태   파트너 변호사 | T. 02-3479-2382 | E. sangtae.jung@barunlaw.com |
| · 강태훈   파트너 변호사 | T. 02-3479-2462 | E. taehun.kang@barunlaw.com  |

### [상법]

- |                 |                 |                               |
|-----------------|-----------------|-------------------------------|
| · 안윤우   파트너 변호사 | T. 02-3479-2640 | E. younwoo.ahn@barunlaw.com   |
| · 최재웅   파트너 변호사 | T. 02-3479-5762 | E. jaewoong.choi@barunlaw.com |

### [AI / 반도체]

- |                 |                 |                               |
|-----------------|-----------------|-------------------------------|
| · 정영훈   파트너 변호사 | T. 02-3479-2647 | E. younghun.jung@barunlaw.com |
| · 최진혁   파트너 변호사 | T. 02-3479-4142 | E. jinhyuk.choi@barunlaw.com  |

### [신성장동력 산업]

- |                 |                 |                               |
|-----------------|-----------------|-------------------------------|
| · 하성용   고문      | T. 02-3479-2666 | E. sungyong.ha@barunlaw.com   |
| · 김재형   파트너 변호사 | T. 02-3479-5749 | E. jaehyeong.kim@barunlaw.com |

### [에너지]

- |                |                 |                                |
|----------------|-----------------|--------------------------------|
| · 박형덕   고문     | T. 02-3479-6824 | E. hyungduck.park@barunlaw.com |
| · 이승교   외국 변호사 | T. 02-3479-2365 | E. seungkjo.lee@barunlaw.com   |

